

행안부, 광주도시철도공 채용 비리 조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무기계약직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이번엔 행정안전부가 심층조사에 나서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시 감사위원회는 전날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조사위원들을 보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심층조사는 14일까지 이어지며,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채용 현황 등이다.

시 감사위는 앞서 지난해 말까지 광주도시공사 등 시 산하 공기업과 광주복지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시

지난달 특별점검 후 이달 11~14일 심층조사 채용 과정 뒷말·부적절한 뒷거래 여부 촉각

체육회 등 모두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특별점검을 벌였으며 이 중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행안부 주관 심층조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9일 열린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원 빼돌리기를 비롯해 사장 운전직 몰래 채용, 사장의 고교 총동창회 간부 채용, 학·지·혈연 연

루설 등 온갖 의혹이 쏟아졌다. 면접접수 임의 변경, 규정에 맞지 않는 채용 계획과 절차, 불명확한 내용을 담은 채용 공고, 비전문직 직원 채용 등 위압이나 채용 비리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비리 종합세트와도 같은 비정상적인 채용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들쭉날쭉한 면접 난이도, 몰아치기식 집단 면접, 유경험자 무더기 탈락, 면접

관 지정 논란, 외부기관 의뢰 묵살 논란, 필기와 인·적성평가 생략 등도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8월 역무원과 미화원, 시설 분야 등 무기계약직 37명을 채용했으며, 지원자는 565명으로 1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올해 도시철도공사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이 '석연찮다'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서은홍 기자

도로 따라 걸던 60대 조선족 차에 치여 사망

도로를 따라 걸던 60대 조선족이 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28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펜션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김모(53)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조선족 이모(63)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이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눈은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이씨를 미처 보지 못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김씨를 도로교통법(전방주시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음주차량 변압기 '쿵'...40여분 정전 '불편'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아 수백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11일 오후 9시37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한 교차로에서 양모(57)씨가 몰던 이번호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롯가에 설치된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양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인근 주공아파트와 식당 등에 40여분간 전기가 끊겨 추운 날씨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진 관계자는 "꿀벌로 전력이 복구됐지만 일부 아파트는 자체 전력이 복구되는데 시간이 걸려 불편을 겪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변허 정지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가스계량기에 필로폰 숨겨 거래 中동포 일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3억5000만원 어치를 팔아치운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총액 A(4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근처에 위장 택배 회사를 세워놓고 중국 인기 SNS인 '위챗'을 통해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1g당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받은 뒤 위챗 대화방에서 필로폰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한 장소는 대림동 주거지 일대 가스계량기나 배수관 등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인이 마약을 권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142.6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마약을 경합한 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남성 쇠사슬 감긴 채 불에 타 사망

예천에서 30대 남성이 쇠사슬에 감긴 채 불에 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북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58분께 예천군 풍양면의 한 다리 난간에서 A(34)씨가 목에 쇠사슬이 감긴 채 숨져 있는 것을 행인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체 부검 결과 A씨가 다리 난간에서 스스로 쇠사슬을 목에 감고, 휘발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거주하던 인천의 한 원룸에서는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밀린 방세는 방안의 집기를 팔아서 해결하라"고 적혀 있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예천이 고향인 A씨는 11년 전 가족과 다툰 후 가출해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희도 추워요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12일 전북 김제시의 한 한우농가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들이 방한복을 입고 추위를 견디고 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전남 한정식집 5곳 적발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남도한정식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조리한 한정식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곳은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한정식 업소로 목포 2곳, 여수 1곳, 화순 1곳, 해남 1곳으로 총 5개소이며, 이들 업소 대부분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곳이다.

해당 업주들은 한정식 메뉴에 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감치 등 농축산물과 낙지, 오징어, 갈치, 꽃게,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후 한상에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의 고가로 판매하다가 들키가 잡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들이 한정식에 나오는 음식들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수입산으로 표시하면 업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희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한정식 하면 전남이 떠오르는데 남도 한정식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해수부 공무원들,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확인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회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조사결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5월 14일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개최된 관계자회의 때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인원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

영하지 않은 정황도 확보했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감사관은 "이에 따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

또한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혐의 없음(중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됐음을 확인했다.

류 감사관은 "이와 관련해 고소인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의혹 해소를 위한 자체 조사가 곤란했다"며 "차후 제2기 특조위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8일 특조위 전일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기로 자체 의결한 바 있으므로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이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간에 대해서는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인길 5

광산구